文, 유럽 순방 마무리… 한반도 평화·기후외교 지평 열었다

7박 9일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길
순방기간 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저탄소 경제 전환 협력 등 약속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부다페스트홀에서 열린 한-V4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마친 후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길에 오른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부터 G20 정상회의,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등 문 대통령은 7박 9일간 일정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기후외교 지평 확대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꼽힌다.

유럽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꾸준히 당부했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첫 순방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진행한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면담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2018년에 이어 교황에게 또다시 방북 요청을 했다. 교황은 문 대통령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G20 기간인 지난달 30~3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남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양 정상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요청하거나 정상들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한국의 방역 및 경제 회복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에 참석, 한반도 평화 기원 메시지를 발신한 점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이 로마에 모인 상황에서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평화의 십자가로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와 지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행동과 연대' 주제로 열린 COP26 정상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 ▲30%의 메탄 감축 및 '국제메탄서약' 동참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협력(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통한 기후 재원 지원,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 통한 녹색기술 분야 협력 확대) ▲그린 뉴딜 ODA(ㄴ정부개발원조) 확대 ▲P4G의 민·관파트너십 통한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이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다자 기후 파트너십 구축도 적극 희망, COP26 의장국 영국이 의장국 프로그램에 한국을 복수로 초청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외교 지평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GCF, GGGI 등 주요 기후 재원 기구 소재지국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재원 기술, 통합적 지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 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G20과 COP26 등 다자회의와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관련 정책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백신 협력 관련 국제사회 지지 견인 ▲G20 정상선언 내 각국의 백신 접종 상황 모니터링 등 정상급 지침을 이끌어낸 점 ▲저소득국 경제 회복 지원 차원의 기존 10억 IMF 특별인출권(SDR)+4.5억 SDR 추가 공여 및 채무 부담 완화 조치 지지 표명 등을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일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이어 V4 가운데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어 7박 9일간 순방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5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與, 입법으로 李 지원… 재난지원금엔 이견

(이재명 후보)

'대장동 방지법' 당론으로 채택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 공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부터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맞불을 놓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도 등 특정 소수가 개발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줄곧 공언했다.

이 후보의 방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며 이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 개정안'과 민간 부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등을 발의했고,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재차 요청한 국민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을 비롯해 당정도 온도차를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요청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다. 또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15조~25조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반발의 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매표 행위'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의 여야 합의와 추경 편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교섭단체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지금은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간이 아닌 손실보상의 시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난색을 보이며 고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의 추가 부담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 올해 예산이 2개월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반면에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의지는 확고해 향후 당정 간에 갈등도 촉발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예산이란 남아서 (집행)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野 경선투표 흥행… 본선까지 이어질까

대선 경선 당원투표율 63.89%
신규 당원 26만5952명 입당

국민의힘이 5일 소집하는 2차 전당대회에서 당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가운데, '흥행 몰이'에 성공한 당내 분위기를 본선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흥행은 높은 당원투표율, 유튜브 토론회 조회수의 우위 등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투표가 끝난 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당원투표율은 63.89%로 집계됐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6·11 전당대회 당시의 당원투표율 45.36%를 뛰어넘은 수치다.

당 공식 유튜브 계정 '델리민주(더불어민주당)', '오른소리(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조회수를 비교해도 4일 오후 1시 기준 오른소리의 우위였다. 당 공식 채널 조회수 만을 확인했을 때, 약 5배의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지난 9월 4일부터 대선 후보 지역순회 합동토론회를 총 11차례 중 델리민주의 평균 토론 조회수는 약 10만 1000회였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10월 11일부터 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로 치른 3번의 맞수 토론과 7번의 지역 순회 토론회의 평균 조회수는 약 52만2000회로 차이가 났다.

신규 당원도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규 당원으로 26만5952명이 입당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중 10~40대 연령층의 신규 당원이 11만8000여명으로 직전 4개월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관위가 많은 토론회를 준비해 국민들이 후보 검증을 하게 하고 대선 후보 구성이 역동적이어서 보는 재미를 배가시켰다고 경선 흥행 원인을 분석했다.

배 최고위원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원이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커졌던 것 같다"며 "당이 처음에 경선을 준비할 때 국민 참여형 경선으로 흥행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께서 후보들을 검증하면서 적합한 후보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최고위원은 후보의 면면도 흥행에 도움이 됐다고 언급하며 "다양하게 연륜 있는 베테랑도 나오시고, 정치 신인도 나오셔서 국민들이 여러가지 면면을 비교해 보시기에 재미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 안에서는 흥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흥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전체 대선의 판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의 행사"라며 "투표율이 높다는 것 가지고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협조이고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흥행이라는 것은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로 인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의 선거 구도 상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야당에 나타나 흥행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